월/요/광/장

구길선

사형제 폐지의 전제 조건

최근 사형제를 둘러싼 사회적 담론이 치열하다. 사형제 논란과 관련해 주목을 받았던 사건은 이른바 '보성 70대 어부 연쇄살인사건'.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주꾸미 채취업을 하던 한 어부가 2007년 8월 31일 보성으로 여행 온 10대 남·여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우고 나서 여성을 성추행하기 위해 남성을 먼저 바다로 밀어 숨지게 하고 저항하는 여성도 바다로 밀어 숨지게 했고, 또한 2007년 9월 25일에도 자신의 배에 탄 20대 여대생 2명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사건이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소된 그는 1심 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위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게 된 광주고등법원은 2008년 9월 17일 재판을 중지하고 헌법재판소에 사형제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25일 재판관 9명 중 합헌 5명, 위헌 4명의 의견으로 사형제에 대해 합헌결정을 했다. 1996년 7대2로 합헌판단을 한 지 14년만의 결정이다. 합헌결정은 그대로 유지됐으나 위헌의견이 4명으로 늘었으며,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 2명도 입법적인 해결 등을 권고해 사형제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됐다. 이 결정 이후 광주고등법원은 위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을 속개해 지난 3월 25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최근의 우리 대법원 판례는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즉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격, 지능, 교육 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명확할 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하여 과거 판례보다 훨씬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8년 건국이래 998명을 사형집행하였고, 최근에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이래 10년이 지나도록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현재 사형 미집행자수는 58명이다).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2007년 10월 현재 완전 사형 폐지국은 102개국이며 사실상 사형 폐지국은 31개국이고 사형 존치국은 64개국이라고 한다. 사형 폐지국도 물론 과거에는 대부분 사형제를 운영했다가 최근에 이를 폐지한 것이다. 예컨대 영국의 경우 1965년의 살인법을 통해 5년간 한시적으로 사형을 중지한 후 사형존치론자들의 사형 부활주장으로 혼미를 거듭하다가 1998년에야 완전 사형 폐지국이 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제 폐지가 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들이다.

사형 폐지론자들은 '인간이 하는 재판인 한 오판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오판에 의한 사형 판결이 집행된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사형폐지를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사형 존치론자들은 국가나 사회의 방위를 위해 사형이 존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도 지난 2월까지 20여 년간 법관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강력사건을 담당했었고, 그 과정에서 사형선고 여부를 오랜 시간에 걸쳐 고민한 바 있다. 그때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현행법상 사형과 그 이하의 형 사이에 간격이 너무 크다는 점이었다. 무기징역형이 있으나, 20년 정도 복역하면 대부분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것이 현실이고, 유기징역형은 그 상한이 15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다만, 최근 이슈화된 성폭력사건들의 영향으로 위 상한을 30년으로 상향하는 형법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미국과 같이 수백 년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고, 사형을 선고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20년형밖에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고민 끝에 위 사건들 중의 어느 사건에 대해서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이유에서 앞으로 가석방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도 있다.

사형제 폐지는 문명국가로서 언젠가는 이룩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제도를 그대로 둔 채 덜컥 사형만 폐지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길어야 20년형밖에 선고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사형제 폐지의 전제로 가석방이나 감형 없는 종신형(이른바 절대적 종신형) 제도를 신설하고,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폐지하거나, 그것을 수백 년으로 높여야 한다. 그래서 사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감형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수백 년의 형을 선고하여 감형되더라도 오랜 기간 사회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사형제 폐지 논의와 함께 그 전제조건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변호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조보규

시청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추진을 염려하며

천안함 침몰로 전국민이 침통한 분위기에 쌓여있다.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20여일 동안 온 나라가 천안함 침몰사건에 매몰되어 있는 느낌이다.

폴란드 레흐카친스키 대통령이 사망한 러시아 비행기 추락사건에서부터 사망자가 1천여명을 넘는다는 중국 칭하이성 지진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마치 천안함침몰이라는 블랙홀에 빠져 국민들의 눈길조차 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6·2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지역마다 정당별로 후보자를 정하고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무관심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사회전반적인 분위기 속에 나는 일간지 사회면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작은 기사를 보았다. 아마 이 뉴스 또한 천안함침몰이라는 파고 속에 시민들의 눈길조차 끌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광주시 공무원 노조 '민노총 가입 내홍'이라는 제하의 기사. 광주시청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한다고 한다. 설마 잘못 본 것은 아닐까 두 눈을 의심하면서 어떻게 광주시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다는 생각을 했을까? 이런 염려를 하는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뜻있는 인사들이 많을 것이라는 염려를 하면서 결국에는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최근 들어 노동운동은 투쟁보다는 안정, 명분보다는 실용, 중앙보다는 현장을 지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청 공무원 노조가 시대적 흐름과는 역행한 채 민주노총과 동행하겠다고 나선 모습을 나는 쉬이 납득하기 어렵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몰아닥친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온나라 경제가 힘들어하고, 대학을 졸업해도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길거리를 헤매는 등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지금 공무원은 신의 직장, 철밥통이라 불릴 만큼 안정적인 자리다. 기업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로자들은 구조조정 등으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위치라는 지위를 이유로 정년보장 등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 공무원들이 무엇이 부족했는지 더욱더 높은 권익향상을 위해, 힘을 얻기 위해 민주노총에 가입해 하나로 뭉쳐 대정부투쟁을 해나가겠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시청공무원 노조원들이 낸 조합비중 일부가 민노총에 납부돼 투쟁자금으로 쓰일 것이며 이것은 결국 시민이 낸 세금이 민주노총의 투쟁자금이 되는 것이다.

광주시청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게 되면 민주노총의 강령, 규약, 결의사항 등을 준수·이행할 의무를 가지게 됨은 물론 민주노총의 의사결정 기구에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각종 시위 및 정치투쟁에 광주시청 공무원이 참여하게 되고 이는 결국 공무원법상 공무원에게 금지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공무원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해야 할 임무가 있는 조직이다. 아직도 많은 국민은 공무원들의 불친절한 근무행태 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폐쇄된 조직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개방형 직위제 등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공무원의 부정부패 문제도 늘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힘을 얻고자 한다면 시민들에게 존중받고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하며 내부 혁신을 통한 과감한 변화를 도모해야지 더 큰 상급단체에 가입해서 대정부 투쟁을 하는 것은 진정한 힘을 얻는 것이 아닐 것이다. 나는 광주시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의 실질적 고용주인 시민이 외면하는 불행한 일이 현실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아울러 지금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은 천암함 침몰로 온 국민이 침통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단이기주의적인 단체행동을 자제하고 젊은 나이에 조국을 위해 산화한 병사들을 애도하는 분위기 속에 다가오는 6.2지방선거의 공정한 수행과 주민들의 선거참여 열기를 높이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 전 북구청 부구청장〉

기고

정광덕

열정을 다하면 미래 희망이 보인다

선진기업들은 위기관리 능력을 찾는데 항상 부정적 상상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위기를 예방하는데 긍정적 사고는 독약이다. 즉 '괜찮겠지…', '설마 일이 그렇게까지 악화되겠어?'라는 생각은 금물이다는 것이다.

위기관리 전문가들이 많이 인용하는 게 바로 이 '머피의 법칙'이다. 농담처럼 말하곤 하는 법칙이지만 사실 이 법칙의 중요한 의미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개발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한다는 데 있다.

행정기관도 마찬가지다. 모든 경제위기의 포커스를 통해 기대효과를 부각시킨 나머지 자칫 경제악순환의 과정을 도외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과정들에 대해선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해법을 찾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경제의 악순환을 온 몸으로 경험했다. 이제 이를 추스려야 할 단계다. 무엇보다 예산조기 집행을 지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즉 시의적절한 자금배정과 발주기간 최소화, 선급금 집행 등 회계부서의 기본인 집행업무 하나하나가 경기부양에 절대적인 포커스임에 틀림없다. 그 일은 우리 공직자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소임을 다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성패가 가름된다.

최근에 한 가지 신선한 변화가 있었다. 우리 조직 내에 자발적인 동아리가 구성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에 대해 객관적인 검증에 나서 결과물을 도출하고 있다.

신 세원 발굴이나 지방세 제도개선, 체납액 일소 등 자주재원 확충과 원가심사, 계약, 예산집행 등 재정관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행정의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예산절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도 긍정적이다.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기관은 예산절감이 큰 화두이자 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일선 시군에서도 예산의 적정선을 산출할 수 있는 원가심사가 예산절감은 물론 부실사고 예방에도 기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특히 원가심사는 각종 공사나 용역사업의 설계금액이 표준품셈이나 조달가격에 맞게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를 검토 조정하는데 있다.

이렇게 절감된 예산은 당연히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입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지난해 전남도는 원가심사를 통해 전체 사업비의 8.5%에 해당하는 1천1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올해는 800억원을 절약목표로 세우고 2월말까지만 162억원의 예산을 아꼈다.

현재 전남지역 시군 중에 원가심사팀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유일하게 고흥군이다. 지난해 310건을 심사해 24억원의 예산절감을 이뤄낸 고흥군의 사례를 본받아야 할 것이다. 올 하반기엔 전 시군에 원가심사 전담조직이 설치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일들이 곧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보탬이 되고 또 이러한 작은 일들 하나하나가 결집될 때 비로소 경제의 청신호로 연계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과거처럼 여건 타령만 해서는 더 이상 답이 없다. 지역 미래상에 대한 큰 방향부터 꼼꼼히 점검하고 내부역량을 키우는 것이 당면과제가 아닐까 싶다.

〈전남도 세무회계과장〉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사설

금호타이어 조합원 현명한 판단 있어야

워크아웃 중인 금호타이어가 회생을 위한 극적인 발판을 마련했다. 금호타이어 노사가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한 차례 부결된 지 9일만인 18일 산고(産苦) 끝에 다시 타결한 것이다. 이번 노사합의는 회사 회생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오는 21일로 예정된 찬반투표에서 조합원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하겠다.

이번 노사 합의안에서는 그동안 최대 쟁점이었던 상여금과 정리해고 부문에서 노조 측의 입장이 대폭 반영됐다. '정리해고 철회'와 상여금 100%를 더 확보한 것이다.

이번 타결은 워크아웃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서 노사가 '공멸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채권단의 노조 동의서를 전제로 한 경영 정상화 이행 계획에 대한 양해각서(MOU) 체결 시한(20일)을 넘길 경우 법정관리나 최악의 경우 청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노조 조합원들의 판단이다. 조합원들은 지난 1일 강경파의 주도로 노사가 어렵게 이룬 잠정 합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만약 이번에도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돼 법정관리로 간다면 국내공장 폐쇄, 현재 189명의 해고자와 1천6명의 도급화 기정사실화, 그 이상의 해고자 발생 등 엄청난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들이 현실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으면 노사 모두가 공멸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얘기다.

조합원들은 최근 지역 중견 건설사의 잇따른 부도 등으로 벼랑 끝에 선 광주·전남지역 경제도 생각해야 한다. 기아차와 함께 광주경제의 두 축이자 호남의 대표 그룹인 금호타이어가 원활한 워크아웃을 통해 다시 도약하기를 바라는 지역민의 기대를 또다시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

획일적 교사배치가 농어촌 교육 망친다

학생 수 만을 기준으로 한 교원배치 방식에 대해 전남도가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현재 교원 배정기준인 '4개 지역군'에 도서벽지형을 추가해 '5개 지역군'으로 확대해줄 것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건의했다.

교원배치 방식 수정에 전남도가 앞장설 정도로 전남교육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부터 교원정원 배정기준을 기존 '학생 수+학급수'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 기준으로 변경하면서 농어촌 지역 특성상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지역은 교사수가 대폭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714명에 이어 올해에는 무려 783명의 교사가 타 지역으로 떠나게 됐다.

교사 감소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학급당 학생정원이 급증해 학습여건이 크게 악화됐으며,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相馳) 교사도 증가했다. 올해에만 정원외 기간제 교사 투입에 50억원이 소요되면서 열악한 전남도교육청 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더욱이 내년부터 신규교사의 임용 자체가 막힐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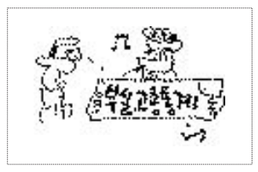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최근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분석한 결과 지역간 학력 격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지역의 대학수능성적은 2년 연속 전국 중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학교가 많아 우수한 지역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도·농간 학력격차는 자녀 교육을 위해 도시로의 인구 유입을 부추기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교육여건 개선 없이는 농어촌을 살릴 수 없다. 열악한 농어촌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 농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교과부의 획일적 교사배정 방식은 즉각 수정되어야 옳다.

無等鼓

부실 통계

"거짓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 빅토리아시대 영국 수상을 지낸 벤저민 디즈레일리가 남겼다는 우스갯소리다. 통계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담긴 표현이다. "통계로 무엇이든 증명할 수 있다"거나 "통계는 법정의 증인과 같아서 피고를 위해서도, 원고를 위해서도 부를 수 있다"는 말 역시 오명을 뒤집어 쓴 통계의 위상을 반영한다.



사회나 자연집단의 상황을 숫자로 나타낸 통계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그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 국가나 기업의 정책결정에서부터 개인의 가치판단에 이르기까지 널리 이용된다. 수많은 수치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집약해주며, 이를 통해 핵심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올바른 준거와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했을 때의 얘기다. 기준 설정의 오류로 인해 되레 혼란을 주거나 의도적으로 조작된 '나쁜 통계'도 적지 않다.

늘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고용통계다. 주변엔 실업자와 청년 백수가 넘쳐나는데 정부가 내놓는 실업률은 늘 3~4%대이다. 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는 여론조사 결과도 곧잘 논란거리가 된다. 설문 내용이 조금만 바뀌어도 결과에 큰 차이가 나는 탓이다. 통계의 마술에 눈뜬 자치단체들은 각종 수치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재가공해 선전하는 연금술을 부리기도 한다.

정부는 올해 각 부처에 대한 역량 평가 때 통계 활용도를 반영하고, 사상 처음으로 품질 진단도 실시키로 했다. 정책수립의 근거가 되는 국가승인통계는 모두 858종에 이르는데 그 품질이 천차만별이고 부실한 통계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실업률을 비롯한 국가통계가 부실하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효과적인 정책을 제때 세울 수 없게 만들고, 국가경쟁력까지 갉아먹는다.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통계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정후식 경제부장 who@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AX	227-9500〉	〈FA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AX	02-773-9335〉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